

# 경기 양극화와 중소기업 금융 지원 과제

임진국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국제경제학

최근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들이 발표되어 내용에 있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내 금융 시장의 활성화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인 정책의 양산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착실하게 개선해 가는 자세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 대책 마련은 국내 금융 시장을 비롯한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 지속되는 경기 양극화 현상

금년 상반기 중에 작년에 이은 경기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경기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공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표 1> 금년 상반기의 생산 활동 현황

(전년동기비, %)

	1994	95.1/4	2/4	4월	5월	6월
생 산	11.1	14.1	12.2	14.0	12.5	10.0
중화학	13.9	17.8	16.1	19.2	15.8	13.2
경공업	3.1	3.8	1.2	-0.7	3.2	1.0

자료: 통계청.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판매 부진과 자금회수의 지연 등으로 어음 부도율이 금년 들어 6월까지 0.2%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6월중 어음 부도율이 0.76%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부도 업체 증가율에 있어서도 금년 1~6월 중에 제조업 14.4%, 건설업 41.7%, 서비스업 42.3%를 기록하였다.

###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지난 5월 상업 어음 할인의 확대 실시에 힘입어 소폭 개선되긴 하였지만,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분기별로 조사하는 자금 사정 BSI 지수가 95년 1/4분기 86에서 2/4분기에

는 89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sup>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100을 하회함으로써 악화의 정도가 줄었을 뿐 전체 중소기업(조사 대상) 중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호전되는 기업보다 수적으로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초 瑞·경제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발표된 보도 내용(서울경제신문, 8/3)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 사항은 자금난(20.8%)이며, 대금 회수 지연(12.3%)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정책

#### 최근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 내용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에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마련에 나섰다. 왜냐하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산업 구조 조정의 원활한 진행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인력난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업체들에 대해 대기업의 현금 결제 비중의 제고와 어음 결제 기간의 단축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기타 중소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팩터링社의 설립·운영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할 예정이다. 기타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대출 담보 취득 제한의 철폐에 의해 지원코자 한다.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발표 내용

항 목	내 용
담보 취득 제한 폐지	- 중소기업은 제 1, 2 금융권에 서 보유 담보에 의한 대출이 모두 가능해짐 - 대기업은 종전대로
信金에 한해 여신 금지 업종 폐지	종전 11 개 금지 업종에 대한 자기 자본 규모의 여신 허용
영세 소기업의 어음 할인 보증 강화	- 8월 21일부터 1 년간 한시적 으로 제조 5,000만 원, 비제조 3,000만 원 한도에서 금융 기 관의 간이 보증으로 어음 할 인 가능
도소매 및 서비스업의 자금 지원	- 기존 자금 지원에 대한 의무 비율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

자료: 연합통신, 1985. 8. 16.

이밖에 어음 결제 기간의 단축(60 일→45 일), 상업 어음 할인의 활성화 기금의 조속한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이번 조치들을 보면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1) 중소기업 자금 사정 BSI는 해당 분기에 前분기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보다 숫자가 많으면 100보다 작게 나타남.

기본 틀을 바꿀 전환점을 마련코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 반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라기 보다 진행되어온 조치들의 후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전까지 실시되어온 중소기업 금융 관련 정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설정 운용
- 상업 어음 할인 우대
- 무역 금융 용자 단가 우대
- 주요 정책 자금 지원
- 직접 금융: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시 우선 배정
- 신용 보증

<표 3> 제 2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

	지 원 내 용
투자금융회사	할인 어음 보유액의 35% 이상
종합금융회사	기업(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제외)에 대한 리스 계약액, 팩토링 금융 어음 또는 채권 보유액, 할인 어음 보유액, 어음 지급 보증 합계액의 25% 이상
생명보험회사	기업 대출 증가액의 35% 이상
상호신용 금고	총여신의 80% 이상을 소규모 기업 및 개인에 지원
리스 회사	리스 계약액의 50% 이상

자료: 대한상의.

지난 7월, 3 단계 금리 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책 금융의 금리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함에 있어서 신용도에 의한 가산 금리의 차등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거의 소위 '주인 없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영의 효율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기 전까지는 바람직한 자금 조달역으로서 자리잡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되어 온 각종 긴급 지원책들이 구조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과성 조치에 불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속적 실효성을 보장할 만한 중소기업 육성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전체적인 금융 시장의 역할 제고와 산업 정책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금융 시장의 자율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제반 자유화 방향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강화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등의 자칫 상호 모순적인 정책 입안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요컨대, 은행,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데서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문제의 전반적 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

### 중소기업 문제를 보는 시각의 재정립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단순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로서 힘이 없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실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측면을 핵심에 놓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소기업들의 생성과 소멸이 그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속한 사업 영역의 특성과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 계열 체계 속에서 볼 때, 효율적인 생산 관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틈새 시장을 채워주는 경제 체제의 완성자로서 그 역할 담당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창업 정신과 금융 산업의 불가분 관계

작은 규모의 사업체로서 중소기업은 모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사업 전개를 피하려는 의욕을 갖기 어려운 것이 국내 현실이다. 국내 금융 산업이 未발달 또는 未분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즉, 국내 금융 기관이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에 더 좋은 대출 조건에 더 많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을 모니터링하는 역

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물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지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 측면에서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실물·금융의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 ■ 금융 기관의 역할 제고

은행 업계는 최근 주 고객이 종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전방적인 운영 체제를 이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시스템의 정비·확충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신용도에 따른 적용 금리의 차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은행들은 자금 운용 능력의 배양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 금융의 전담 기관 정비

현 시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문제의 최종 귀결점은 중소기업 금융의 전담 기관에 대한 정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제도 정비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문제 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전담 금융 기관의 정비 문제는 하나의 금융

산업 확충의 문제이기도 하며, 형평성의 유지 문제가 이번 정책 입안의 한계선을 긋고 있다. 즉,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의 달성은 이러한 금융 기관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경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의 선진화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 대안인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 위험의 분담(risk sharing), 위험의 계층화(risk layering), 위험의 내부화(risk internalization) 등이 지적되어 왔다.<sup>2)</sup>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 기관들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시장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의 자금 유통과 확대 재생산의 체계 구축에 있어서 금융 기관은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가계-금융 기관-기업을 연결짓는 금융의 발전이 금융 업계의 핵심적인 과제라 하겠다. 나아가 요즘에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금융 업무가 통합 관리되는 경향을 띠며 따라 이를테면 신용 관리 체계의 효율화가 지향되고 있다.

### 총액 대출 비율 유지의 문제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시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 기관에 대한 총액 대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총액 대출 비율을 축소해감으로써 간접 통화 관리 방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총액 대출 제도가 문제시되는 것은 일반 예금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떠안게 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재할인 제도를 통해 지원해줌으로써 통화 신용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데에 있다.

한편, 금년 들어 예금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 상반기중 총대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액은 17.9% 증가하여 비중이 60%로 늘어났다.

<표 4> 예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추이

	1991	1992	1993	1994	95. 상반기
비중(%)	56.8	56.3	59.3	58.8	60.0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일본의 경우, 총액 대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90년대 70% 수준을 보임으로써 현재의 우리보다 높다. 이는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뒷받침됨으로써 대출 및 보증 재원이 거의 재정에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 자유화 및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직접 금융 및 국제 금융 시장으로 크게 전환될 것이다. 이

2) '금융자유화와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장충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1994. 3), pp. 115~6.

에 따라 은행 업계는 상대적으로 위축을 겪게 될 것인 바,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의 설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더이상 무리하게 떠맡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자유화 추진 속에서 재할인 정책을 더이상 중소기업 상업 어음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에 묶어둘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이끌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신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인 데 반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방침의 발표로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들게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신용 대출 자금을 건전하게 생산 자금화하지 않고 사재화하려는 풍토가 아직 불식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 금융의 지속은 또한 금융 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자금 배분역도 또다시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 시장의 개방 속도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외부와의 연관성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개방에 대한 준비 태세의 정비가 늦어짐으로써 개방의 충격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금융 기관도 중소기업에 못지 않게 경영의 합리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나아가 자본 시장의 자유화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면 금융업의 개방과 함께 선진 제국의 금융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주저앉을지 모를 위협을 벌써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되도록 금융 기관, 특히 은행 업계의 자율에 의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 기업간 협력 관계 증진 및 중소기업의 노력 필요

#### 대기업의 지원 대책 발표

대기업들은 8월 청와대 모임을 계기로 ① 대금 결제 조건 개선, ② 부품 공동 개발, ③ 해외 마케팅 및 해외 공동 진출 확대, ④ 中企 팩터링社 설립 지원, ⑤ 기술 및 경영 지도 활성화 등 5 개 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대기업-정부-금융 기관 등의 4 자간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대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포괄적 대책들을 마련, 발표하고 있다. 그것은 하청 계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관계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주로 경공업과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 대공세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대기업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으로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라 하겠다. 그동안 이끼해의 공동 진출을 통한 상호 협력이 추구되어 왔는데 이제 더욱 체계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물 측면의 협조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양자의 협력 강화를 유도할 만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세계화 추진의 공동 과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개방화 압력과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세계화 추진은 제조업과 금융업의 동시적 세계화를 요구한다 할 것이다. 즉, 장차 중소기업이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능력의 확충이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의 수요량과 취향의 변화를 앞서 파악하고 대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신속하게 이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 또한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양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간에 상품 생산의 위탁 및 공

동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꾀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자금 조달이 가장 커다란 애로 사항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기업은행 조사).

### 중소기업의 경영 정책과 비용 구조 개선

한편으로,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영 정책에 있어서 선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이것은 결국 기업 내부의 비용 구조에 있어서 합리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금융 행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작은 자본 규모와 신용의 취약성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기업 규모별 금융 행태 특징

	종업원수	금융 행태의 특징
소기업	20 인 미만	신용도 및 담보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사채 및 제 2 금융권 대출 중심
중기업	20~99 인	은행 대출 중심
중견기업	100 인 이상	은행, 제 2 금융권의 회사채 등 직접 금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자료: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 실태 조사」.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 자금 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내부 금융의 비중이 매우 낮고, 둘째, 외

부 금융에서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으며, 셋째, 예금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넷째, 외부 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 대출 비율이 매우 높다. 다섯째, 기업 규모의 영세성, 신용도의 취약 등으로 직접 금융 및 해외 금융 조달이 어렵다. 이러한 자금 조달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가 올 들어 늘어난 것은 각종 원가 부담 증가에 의한 채산성 악화가 주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기업은 원화 절상으로(전자 부품·기계류), 일반 중소기업들은 경쟁 심화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 단가 책정, 주요 원자재 공급 업체의 부당한 거래 조건 요구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금년에 국한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계속 직면해온 것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경영 개선과 비용 구조의 개선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자동화, 창업 등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 지원적 성격이 강한 부

문과 금융 시장의 발전 과제는 분리시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 자율화와 금융 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의 계속적 추진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통로를 넓혀 준다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동반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상호간 금융 협력을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정책과 비용 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대기업의 공동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도기적인 통화 금융 정책의 과제

최근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한국은행이 총 통화 관리 차원에서 국내 여신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것이 중소기업에 자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향후 해외 부문에 의한 국내 통화 변동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총량 규제 방식에 의해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틀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정책 일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금융 자유화와 상호 모순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면, 과도기적인 통화 금융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